관계부처합동 | 보도참고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 배포 시점 | 배포 | 2026.11.23.(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 1.5℃ 초과 최소화, 전기화, 기후재원 확대 등 핵심 메시지 담은 대표결정문 도출 시도.. 화석연료 전환 문구 배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채택 불발 -

- 감축·대응조치 관련 결정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적응·정의로운 전환·기후재원 등 의제에서는 결정문 채택 -

- 라이즈 아시아(RISE ASIA), 세계 고신뢰 탄소시장(GVCM) 등 한국 주도 국제협력 기반 확대 -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당초 예정된 11월 20일보다 이틀 늦은 11월 23일 오전 1시(한국 기준, 튀르키예 22일 오후 7시)경에 대표결정문(cover decision) 채택이 불발된 채 폐막하였다.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관한 포괄적 합의에 실패한 것은 2009년 코펜하겐 총회(COP15)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상회의에는 강금실 글로벌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였으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 실무를 맡았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

이번 총회는 파리협정 발효(2026.11) 10주년을 맞아 그간 수립한 기후 목표를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연결하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의장국 튀르키예

는 대화·합의·행동(Dialogue·Consensus·Action)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후행동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협상의장국 호주는 1.5℃ 초과 대응과 기후취약국 지원 강화, 포용적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당사국들은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개막일(11.9) 의제를 원활하게 채택하며 순조롭게 출발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 이행 강화를 강조하는 선진국과 기후재원·기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었다. 특히 감축, 적응, 정의로운 전환, 재원, 대응조치 등 주요 의제에서 이견이 이어지면서, 실무협상과 고위급 정치적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였다.

튀르키예·호주 의장국은 지구 평균기온의 1.5℃ 초과(오버슛) 최소화와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 등 COP31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대표결정문(Antalya Pact) 마련을 추진하였다. 동 결정문 초안에는 우리나라도 주장한 △1.5℃ 초과의 규모·기간 최소화, △전기화 확대, △기후재원 확대, △국제협력 강화, △해양-기후 연계 강화, △1차 무역-기후 대화 개최 평가 등이 담겼다. 의장국은 협상 시일을 이틀 넘기면서 이견을 조율하여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반영 등에 대한 당사국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못하였다.

한편, 의장국은 '이행의 COP'라는 기조 아래 정부 간 협상과 별개로 전기화, 인공지능(AI), 해양, 녹색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구체적인 기후행동 확대를 독려하였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결과

[감축(Mitigation)]

금번 총회에서는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MWP, Mitigation Work Programme)*의 2027년 이후 지속 방안과 국가결정기여(NDC) 특성에 관한 추가 지침이 논의되었다.

* 2023년부터 연 2회 글로벌대화체와 투자중심행사를 개최하여 부문별 감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경험 공유 및 투자 활성화 유도(~'26)

당초 2026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작업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지속 여부와 운영 기간, 다년도 작업계획 도입여부, 논의 결과물의 성격, 전지구적 이행점검(GST)과의 연계 등을 협의하였다. 의장국 중재안을 중심으로 작업프로그램의 지속과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루었으나, 전지구적 이행점검(GST)과의 연계를 둘러싼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정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 의제는 제9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9, 2027)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제7차 글로벌 대화체와 투자중심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 다년도 작업계획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과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가결정기여(NDC) 특성(features)에 관한 추가 지침은 2024년 제6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6) 합의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논의되었으나, 파리협정에 이미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는 입장과 NDC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 실질적 지침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 의제는 제9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9, 2027년)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적응(Adaptation)]

금번 총회에서는 전지구적 적응목표(GGA)*, 최빈개도국 관련 사항 등 적응 분야 여러 의제가 논의되었다.

* Global Goal on Adaptation(GGA) : 파리협정 제7조에 따른 적응 분야의 전지구적 목표로, 2025년 제7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7)에서 진전 측정을 위한 벨렝 적응지표(59개) 채택

전지구적 적응목표 의제에서는 지난해 채택된 벨렝 적응지표를 각국이 실제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후속 작업을 논의하였다. 가장 큰 쟁점은 지표의 메타데이터와 방법론, 즉 지표별로 어떤 자료를 쓰고 어떻게 측정할지를 정리할 기술 태스크포스의 구성이었다. 지역그룹이 위원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술적인 작업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최종적으로 지역그룹별 6명과 최빈개도국·군소도서개도국 각 3명 등 당사

국이 지명한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하고, 부속기구 의장이 11개 적응 목표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배치하는 방식으로 양측 입장을 절충하였다.

기술 태스크포스는 2027년까지 59개 지표별 메타데이터와 방법론 지침을 만든다. 측정 방법이 이미 있는 지표는 이를 정리하고, 아직 없는 지표는 앞으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제시할 계획이다.

최빈개도국 관련 사항에서는 최빈개도국이 국가적응계획(NAP)에 담은 우선 과제를 실제 사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최빈개도국 국가적응계획 이행 플랫폼'을 최빈개도국전문가그룹(LEG)* 산하에 두기로 하였다. 동 플랫폼은 그동안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최빈개도국의 우선 과제를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맞춤형 재원 연계 및 진행 상황 점검을 지원한다.

*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LEG) : 최빈개도국(LDC)의 국가적응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

이번 총회 결과는 벨렝적응지표 활용 기반을 다지고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이행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적응 논의의 무게중심이 계획 수립에서 실제 이행으로 옮겨 가는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지난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초로 출범에 합의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에 대한 검토와 지속 여부를 중점 논의하였다. 당사국들은 지난 3년간의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대화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적 장벽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과 통합 운영하여 운영의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 United Arab Emirates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JTWP) :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경로를 논의하기 위해 '24년-'26년 매년 2회 글로벌 대화체 등을 개최하는 작업프로그램

** Just Transition Mechanism(JTM) : 국제협력, 기술지원,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통해 각국의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또한, 지난해 합의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의 운영화를 위한 거버넌스 및 주요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별도 기구 신설과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구 및 유엔 체계 활용 방안 등을 두고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의 거버넌스와 기능,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내년 회기에서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COP31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의 연장에 합의하여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금번 총회에서는 2026년도 연례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대화체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실질적 메시지 반영을 두고 당사국 간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지난 3년간 대화체를 통한 지식·경험 공유의 기여를 인정하고, 요약보고서의 교훈과 우수사례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대화체의 종료를 확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COP31 의장단은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의 개시를 알리는 장관급 고위급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 고위급 대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적 진전 상황과 향후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 추진 방향 및 기대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평가와 포용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1)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재원(Finance)]

재원 분야에서는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을 포함한 제9조 전반의 맥락에서 기후재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합의된 '기후재원 워크 프로그램(Climate Finance Work Programme)'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였다. 당사국들은 2028년까지 워크숍 개최 및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선진국의 재원 제공 등 기후재원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

또한 지난해 결정된 '2035년까지 적응재원 최소 3배 확대 노력'과 관련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당사국들은 적응재원 확대의 기준선 및 이행 경로 등 후속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울러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의 운영 진전을 확인하고, 기후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지원 요청의 적시 심사를 기대하는 한편, 다른 다자기후기금과의 협력 및 상호보완성 강화를 독려하였다.

한편, 교토의정서에 기반하여 설립된 적응기금의 파리협정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한 제도적 사항에 합의하였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이번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WIM)*의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공동연례보고서를 검토하고 WIM 거버넌스 협상을 진행했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 바르샤바)에서 설립 결정

**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방지, △최소화,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제25차 당사국총회(COP25, 마드리드)에서 설립하고 사무국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로 선정

공동연례보고서 검토* 관련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기술지원 이행 지연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처리기간 공개와 지연 사유 보고를 요구하는 개도국과 처리기간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사무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는

선진국 간 의견이 대립되었다. 당사국들은 이 밖에도 재원 공약 철회**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자발적 보고 지침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 40건이 넘는 기술지원 요청 중 이행중 요청 4건, 종결 단계 요청 1건(2026.10.1 기준)

** 영국은 COP27에서 산티아고 네트워크에 500만 파운드 지원을 공약했으나, 2026. 3에 철회(전체 약정액 4,790만 달러의 약 14%)

최종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현행 단계별 기술지원 처리기간을 제8차 자문위원회 회의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결정문을 통해 △기존 공약의 신속한 이행 촉구, △조기경보시스템 등 손실과 피해 정보 기반 강화, △최빈·군소도서개도국 지원 및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WIM) 집행위원회, 산티아고 네트워크와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FRLD) 간 협력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술지원의 투명성과 취약국의 지원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이번 제3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제6.2조 이행에 관한 사무국의 연례보고서와 제6.4조 감독기구의 연례보고서 및 권고안을 검토하고, 국제탄소시장의 이행과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제6.2조의 경우, △기술전문가검토(TER)의 이행 경험 공유를 위한 대화 개최, △중앙회계·보고 플랫폼(CARP)과 제6조 데이터베이스 개발 우선 추진, △개도국의 보고 역량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제6.2조 인프라와 기술전문가검토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제6.4조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관한 신규 방법론 4건의 채택 성과 확인, △방법론 개발 우선순위와 선정 근거의 연례보고, △표준·방법론·도구를 함께 적용할 때의 영향을 향후 개발·개정에 반영하는 등 운영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감축실적 발행 후 유치국의 허가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은 적응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감독기구가 계속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27년 파리협정 당사국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는 국제탄소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이행체

계의 운영을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감축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협력의 실질적인 이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6.8조(비시장접근법, NMA)의 경우, 제10차 비시장접근법 글래스고위원회(GCNMA) 계기 회기중 워크숍, 원탁회의, 스핀오프 등을 통해 NMA 협력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였다. 동 의제의 핵심 쟁점인 △단일 당사국의 NMA 인정 여부, △NMA 작업프로그램(및 검토) 종료 여부, △NMA-MWP(감축작업프로그램) 플랫폼 간 연계 여부와 결정문에 근거한 위임사항 및 법적 해석, △NMA 플랫폼의 기능 수정을 둘러싼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되어 해당 사항을 제외, 최소화된 결정문 초안을 채택하였다.

결정문 초안에는 당사국들이 절차적으로 합의한 제11·12차 비시장접근법 글래스고위원회(GCNMA) 개최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총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잔여 쟁점은 제66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66, 2027.6)에서 논의를 지속하여 COP32(2027.11)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성(Transparency)]

이번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투명성 보고 및 역량배양 지원 방안을 담은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당사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예측가능성·적시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개도국이 보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지원 성과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현지 실습 중심 워크숍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2028년 예정된 투명성 보고 지침(MPGs*) 검토를 앞두고 당사국 간 첫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속한 환경건전성그룹(EIG)과 유럽연합(EU) 등은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조기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수 개발도상국은 투명성 주기 전반의 경험을 더 쌓은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검토 시기와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 파리협정 강화된 투명성체계(ETF) 하에서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의 작성·검토 방식을 정한 세부 지침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공동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UNFCCC-GIR-CASTT*)’ 10주년을 맞아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호주 정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협력기관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인도·말라위 수료생이 교육 내용을 자국 인벤토리 개선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습 중심 교육 강화와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2027년부터는 BTR 작성 전반으로 교육 범위를 넓혀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Climate Action and Support Transparency Training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개도국 투명성 역량배양 프로그램으로, 이 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교육 과정을 우리나라와 공동 운영 중

[기술지원(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은 기후기술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로, 정책 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TEC)'와 이행 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로 구성된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2013년 설치 이래 유엔환경계획(UNEP)이 관리·운영해왔으며, 올해 운영이 만료되어 당사국은 차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운영 기관에 대해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유엔환경계획(UNEP)이 총 15년(2027년~2041년) 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운영(Host)을 다시 담당하게 되었으며, 당사국은 이를 규정하는 COP-UNEP 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운영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 또한 정책-이행 부문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TEC-CTCN의 2026년도 공동연차보고서에 대한 최종 합의도 이루었다.

[대응조치(Response measure)]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경제·사회 및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대응조치의 이행의 영향에 대한 포럼*'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기후 관련 일방적 무역조치의 국경 간 영향과 감축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가 주요 논의사항으로 부각된 가운데, △2027년 포럼 활동계획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대한 기여 △포럼의 실질적 권고사항 도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 Forum on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대응조치 논의 협상체)

개발도상국(G77)과 선진국(EU, 영국, 캐나다 등)은 감축정책의 부정적 영향평가,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대한 대응조치 정보 투입 방안, 감축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활용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폐회총회에서 의장국이 마련한 결정문 초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반대함에 따라, 결정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제66차 부속기구 회의(SB66)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기 최초로 개최된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5항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국제무역 제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정책의 국경 간 영향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무역 간 조화를 위한 다자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산림(Forest)]

지난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 2026.6)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2026.11.4.)된 'COP30 의장국 로드맵'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 간 평가와 후속조치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사국들은 산림이 1.5℃ 목표 달성과 오버슛 완화의 핵심 탄소흡수원임을 재확인하고, 로드맵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연계하여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신규 산림재원 확대, 원주민·지역공동체 권리 보장, 이탄지·맹그로브 등 다양한 산림생태계를 포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COP31 의장국 주재로 열린 '산악과 기후변화' 논의에서는 네팔·부탄 등 산악그룹이 산사태 등 산악지역 재난 대응을 위한 신규 의제 및 작업프로그램 신설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 당사국은 산악지역의 취약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와의 중복을 피하고 현행 체계 내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신규 의제 채택 대신 기존 체계 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튀르키예·브라질과 공동으로 '안탈리아 통합산불관리 행동계획*' 출범 고위급 대화를 주도해 24개국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장관회의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부대행사 등을 통해 국제 산불 협력과 통합산불관리(IFM) 확산을 강조했다.

* 안탈리아 통합산불관리 행동계획(Antalya Action Plan on Integrated Fire Management)

**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ssuring the Future of Forests with Integrated Risk Management, AFFIRM)

[농업과 식량안보(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농업과 식량안보 분야에서는 지난 4년간의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 공동 작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무역 조치 포함 여부, 재원 접근성 확대 및 식량 생산 시스템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협상그룹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결국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내년 제66차 부속기구 회의(SB66)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 대표단 활동

우리 대표단은 감축, 적응, 재원, 정의로운 전환, 대응조치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우리 협상 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EIG)*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협상 결과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구성된 기후변화 협상그룹

한편, 정상회의, 고위급회의 및 주요 부대행사를 통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과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전환 등 우리 정부의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한-호주 탈탄소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한-호주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는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추진 중인 아시아 에너지 안보 구상(RISE ASIA) 관련 부대행사 및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협력의향서 서명식* 등을 개최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노력도 강조했다.

* 신뢰성 높은 국제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주도 이니셔티브로, 우리 포함 싱가포르, 스리랑카, 모로코, 파라과이 등 9개국이 참여 의사 표명

해양 분야에서는 2028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의향서에 서명하며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해양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 친환경선박,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UNOC4 홍보 등 4개 분야

아울러,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을 35%까지 확대한다는 '글로벌 전기화 서약' 포함, '탄소시장연합(OCCCM)*', '안탈리아 인공지능(AI) 서약**'등 주요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네팔과 기후변화 협력 협정에 서명하는 등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 규제 탄소시장의 투명성 및 환경건전성 강화 등을 목표로 COP30(2025년) 계기 의장국 브라질 주도로 출범한 이니셔티브

** 인공지능(AI)의 기후행동 기여 촉진 및 인공지능(AI) 기술 자체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이번 총회 계기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회의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 이사회(Adaptation Fund Board) 이사직(재경부 녹색기후기획과장)에 4회 연속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을 위한 국제 기후재원 논의에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될 제3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2)에서도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실질적인 기후행동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대표결정문 채택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K-GX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과 에너지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팀 장	최한창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안호정 (044-201-6606)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책임자	과 장	송다희 (02-2100-7859)
		담당자	사무관	이동이 (02-2100-7748)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사무관	손수현 (044-203-4892)
	재정경제부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도익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김요한 (044-215-8754)
			사무관	이수호 (044-215-8751)
			연구원	라정훈 (044-215-87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찬영 (044-202-4670)
		담당자	사무관	손주영 (044-202-4677)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통일 (042-481-4080)
		담당자	사무관	황진영 (042-481-408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지연 (044-201-2051)
		담당자	사무관	곽상익 (044-201-2058)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책임자	팀 장	최재용 (055-773-6267)
		담당자	사무관	심재희 (055-773-6268)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